

극한 대립 지속하는 여야... '내란 청산' vs '대여 투쟁'

민주 "2차 종합특검 검토...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국힘 "이재명 정권 조기퇴장...하나로 뭉쳐 싸워야"

강대강 대치 심화에 극한 대립 극복 시급한 과제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여야의 극한 대치는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교체 이후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며 위헌정당해산까지 거론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주장하며 장외집회를 하는 등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본격적인 지방선거 국면을 앞두고 여야는 더 극단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계엄 1년을 계기로 국회 본정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민주당은 계엄 1년 메시지로 '내란 청산'에 방점을 찍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의 시대정신은 완전한 내란 청산"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3대특검의 미진한 부분은 한 군데서 몰아 공청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정당해산 카드도 여전히 살아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내란 동조 세력으로 '위헌 정당'이라는 헌법적인 해산뿐만 아니라 국민의 심판으로 정치적인 해산까지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여론전에 집중하면서 대어(對興)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장 대표는 지난달 22일 부산·울산을 시작으로 경남 창원, 경북 구미, 충남 천안, 대구, 대전·충북 청주, 강원 원주 인전을 차례로 돌며 이재명 정부 규탄 장외집회를 벌이고 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조기퇴장", "(대장동 항소 포기) 이재명 주범, 민주당 공범", "2025년 12월3일에는 하나로 뭉쳐야 한다" 등 단일대오에 기반한 강력한 대어 투쟁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당 내부적으로는 '계엄 사과' 여부를 두고 강경파와 중도파가 이견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일부 초·재선 등을 중심으로 지도부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발언이 이어지며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에 계엄을 허락받지도, 소동하지도, 설명하지도, 설득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국민의힘에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새 지도부 사명은 당의 재건과 외연 확대이고, 그 시작은 계엄과 대선 패배에 대한 철저하고 이성적인 반성"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민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우리 진영도 결집하지 못한 채 외연 확장이 가능하겠나. 우리 지지자들의 마음을 잃지 못한 채 국민의 마음인들 잃겠나. 우리 당원을 무시하면서 국민을 존중할 수 있겠나. 분당 그만치라"라고 적었다.

국민의힘이 대어 투쟁을 강화하면서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강동혁 국민의힘 대표. /뉴스시스

계엄 사과 메시지를 두고 내용을 쥐는 것은 아직 '계엄의 강'을 건너지 못한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계엄 1년이 지났지만 여당은 '내란 척결'을 외치고 야당은 '이재명 퇴장'을 외치는 극한 대립이 계속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며 "여야 모두 정치를 복원해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야 할 때"라고 했다. /뉴스시스



전라남도 의원연구단체 전남 미래형 늘봄교육 정책연구회가 1일 '전남 미래형 늘봄교육 모델 개발과 학교 내·외 안전사고 예방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전남도의회, 미래형 늘봄교육 구축 첫걸음

정책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전라남도 의원연구단체 전남 미래형 늘봄교육 정책연구회(대표의원 정철)는 지난 12월 1일 전남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전남 미래형 늘봄교육 모델 개발과 학교 내·외 안전사고 예방 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중간보고회에서 논의된 늘봄교육 모델 개발 방향과 비전을 바탕으로, 이후 진행된 연구 성과를 종합하고 실행 가능한 정책 과제와 적용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서는 연구 마지막 단계에서 도출된 전남형 협력체계 구축

방안, 돌봄·안전 분야별 실행 전략, 학교 내·외 안전사고 예방체계 개선 과제 등이 발표됐다.

정철 대표의원은 "이번 최종보고회는 연구 결과를 정리하는 자리지만, 이는 전남형 늘봄교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학술적 연구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와 돌봄기관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해 정책을 구체화하며, 아이들이 중심에 둔 협력과 실행을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와 손을 맞잡고 함께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염선호 기자

여야, '개인정보 유출' 쿠팡 한 목소리로 질타

국회 과방위서 긴급 현안질의...박대준 대표 등 참석

여야는 2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회 긴급 현안질을 열고, 고객 계정 관리와 후속 조치 등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최대 1조원 이상의 과징금을 물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고, 필요하다면 영업정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쿠팡은 지난 6월 24일 해외 서버를 통한 무단 개인정보 접근 시도를 추경했지만 5개월 동안 전혀 탐지도, 차단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쿠팡이 사고 후에 가입자들, 이용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보면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고 '노출'이라는 표현을 했다"며 "과징금 등을 생각해서 이런 표현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한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박정호 국민의힘 의원은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을 향해 "공정거래위

원회에서 할 일인데 영업정지 가능 여부는 체크를 해 봤느냐"라고 물으면서 "전자상거래법 32조 2항을 보면 통신판매로 재산상의 손해가 났을 경우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 이것은 영업정지 정도가 고려되는 사안"이라고 했다.

또한 여야는 쿠팡 측의 답변 태도와 미흡한 자료 제출을 지적하기도 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지금 언론보도만 보더라도 쿠팡 대관이 40~50명가량 된다"며 "회장이나 사장 증인 출석이 될 때는 특달같이 국회로 달려와서 출석 못 하게 막는 역할을 대관이 했는데 자료 요구에는 연락이 두절됐다"고 했다.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건 마치 일요일 아침에 공습경보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모든 국민의 공동 현안이 다 뚫렸고, 가족관계도 다 뚫렸다. 어디까지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모든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고 했다. /뉴스시스

조국혁신당, 전남도당위원장 권한대행에 박웅두 씨

지방선거 앞두고 조직 정비... "당 지키는 수문장 역할 수행"

조국혁신당이 박웅두(57, 사진) 곡성·구례지역위원장을 전남도당위원장 권한대행으로 임명했다.

2일 전남도당에 따르면 공식이던 위원장 자리에 박 권한대행이 지난 1일 취임했다.

도당위원장 선출에 앞서 조직 강화와 정비를 위해 권한대행을 우선 임명했다고 전남도당은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광주 진흥고를 거쳐 전남대 농학과를 졸업했다. 1990년 곡성으로 귀농했다.

지난해에는 곡성군수 재선거 후보로 나서기도 했다. 현재 당 농어민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이광수 기자



박 위원장은 "엄중한 시기 과분한 직책을 부여받았다"며 "당을 지키는 수문장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도당이 호남정치 혁신의 쇄빙선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나실있는 대안정당, 실천하는 책임정당으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광수 기자

與 초선 모임 "1인1표제, 당 총의부터 모아야"

더민초 "수정안 없을 경우 중앙위서 공천률 안전만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2일 입정문을 통해 당에서 추진 중인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와 관련해 "당의 총의를 모으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더민초는 지난달 30일 긴급 간담회를 열고 1인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더민초는 "당원주권정당 추진의 정당성과 대의원 가중치 없는 대의원 권리당원 1인1표의 방향성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1인1표에 대해서는 현재 제안된 안전대로 처리하는 것은 무

리가 있으며, 영남 등 전략지역 가중치를 비롯한 추가 보완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민초는 "최선의 방안은 12월 5일 중앙위원회까지 추가 보완책이 반영된 '합의된 수정안'을 마련하고 만장일치로 처리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합의된 수정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12월 5일 중앙위원회에서는 공천률 등 지방선거와 관련된 안전만 처리하고 당헌당규 개정안은 추후 충분한 당내 숙의를 거쳐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뉴스시스

김 **전복** **대파** **올금**

농수산물은 진도것이 최고지라~

진도아리랑물 **진도아리랑**
 행정 농수산물 공동브랜드